출판인 구속사태 무슨 일 때문인가

이적표현물 혐의로 백산서당 대표 등 구속…대응책 마련 움직임

출판인 구속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이같은 출판인 구속이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아해하고 있다. 출판인 구속은 지난 3월 18일 일빛출판사 이성우 사장과 김병하 영업부장이 연행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90년과 91년에 발간한「노동자의 경제학」「노동자의 철학」「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사회주의자 실천」1, 2 등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구속됐다.

5일 후인 3월 23일 경찰은, 도서출판 힘을 수색하고「지배와 항거」(88년, 이하 괄호 안은 발간년도),「봄우뢰」(89),「혁명의 여명」(90),「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91),「새로운 학생운동사」(93),「실천철학」(93),「청년학생운동」(93) 등 책 1500여 권을 압수하고 대표 김연인씨를 연행했다. 김연인씨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출판인 구속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이같은 출판인 구속이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대검찰청이 '좌익출판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바 있어, 앞으로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출판인 구속은 처음

이어서 4월 19일에는 지난해 10월 말경에 발간된 북한문예출판사「용해공들」의 원전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가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

사회과학 출판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지와 문예물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조선대 교지「민주조선」편집장 차재덕씨(경영 88)와 기획부장 최은옥씨(국문 91)가 5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출판된 지 8년 동안 한국 최고의 소설로 꼽히고 있는「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가 수사되고 있다.

또한 6월 10일에는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가 된 책자는「경제학의 기초이론」(83),「민족자주화운동론」(88),「제국주의론」(89)「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89),「공산당선언」(89),「자본주의란 무엇인가」(89),「북한정치론」(90) 등으로 이미 5~6공 시절에 펴낸 책들이다.

출판사에 이어서 서점에 대한 압수 수색도 이루어졌다.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4월 14일 부산대와 동아대, 경상대 등 대학가 주변 서점들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회과학서적 3백여권을 압수하는 등 출판물 압수 사태도 빚어지고 있는 것.

출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노래극단 '희망새'의 3차에 걸친 단원 구속 사태도 주목을 끈다. '희망새'는 '아침은 빛나라'라는 제목의 음악무용극을 준비중이었으나 미완성 공연대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 김민하씨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문제가 출판계에 각별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음악무용극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이 오봉옥씨의 시집「붉은 산 검은 피」라는 점 때문이다. 이 시집은 1990년 판금조치와 함께 저자 오봉옥씨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오봉옥씨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복권조치를 받았다. 재야에서는 오봉옥씨의 사면복권조치가 그의 작품집「붉은 산 검은 피」의 사면복권조치와 다를 바 없으며, 지금 시내 유명서점에서 그 시집이 비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새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혐의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검찰청은 특히 지난 4월 15일 전국 검찰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좌익출판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시한 바 있어, 앞으로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최근 출판계와 서점계에는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판금도서 목록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겨레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도서목록은 이미 6공화국 시대(89년)에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목록'이라고 한다. 한편 백산서당에서도 경찰이 "4×6배판 크기에 약 200~300쪽 정도 분량의 압수대상 도서목록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도서목록의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빛과 도서출판 힘의 구속사태에 대해 3월 24일 민주출판노동조합협의회(의장 박정철)는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출판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성명서는 이번 구속사태에 대해 "남북한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출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출판탄압 중지, 구속된 출판인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강호)도 지난 4월 20일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서는 출판인 연행과 출판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 "과거의 악행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명서는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서적이나 북한의 도서라 할지라도 충분하고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을 하는 것은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 현정권의 구호에도 어긋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위에서 나열한 구속 및 압수 사건들이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한 것이어서 학문이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출판계가 이번 사건을 보는 한 시각이다.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성우씨는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일빛출판사의 책들은 발간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6공화국 때 나온 책이다. 그 책들은 당시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를 표현하긴 했지만 지금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시각이다."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귀추 주목

서 제시한 공소장을 보면 그 입장의 차이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공소장에 기록된대로라면 일터에서 펴낸「용해공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 건설시기에 겸이포제철소를 배경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 대표(140면)인 공장자위대 대장 박덕봉과 로동자 정치계대표(142면) 박준길, 기술대표 차지훈 등이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정신으로 일제가 파괴한 제철소를 복귀하여 김일성을 친견하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

이와함께 박치관씨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책자임에도, 출판을 위하여 1994. 4. 19. 까지 위 출판사(일터)에 보관하여 소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있다.

정부는 1988년 7월 19일 납월북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1차 해금조치를 취하였고, 1989년 초에는 2차 해금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이후 남북합의서가 체결되고 1992년 8월에는 남북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문안타결을 위한 절충을 벌인 결과 출판, 건축,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상호교류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보는 출판인들의 시각은 '출판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 출판 외적인 문제, 즉 재야 운동권의 노동운동이라든가 통일운동을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똥이 출판계에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서울출판인노동조합의 박강호 위원장은 "출판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인 서명운동으로 펼치겠다"고 말한다.

한편 출판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별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출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며, "이번 구속사태가 출판자유라는 것에 사안이 달려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출판사들이 출협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므로 사안이 파악되는 대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